박영선, 새정치 비대위원장 '이상돈 카드' 파장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위원장직 사퇴 언급은 안해

초·재선 의원 반발 등 논란

새정치민주연합의 뜨거운 감자인 '비상대책위(국민공감혁신위)' 구성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비대위 구성 문제는 추후 당권 향배 및 지역위원장 선임 문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 내부적으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국민공감혁신위를 이끌 역량 있는 분을 외부에서 영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4일 비상대권을 받아든 지 38일만이며 중앙대 이상돈 교수가 외부 영입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 외부 영입 카드는 시작부터 논란을 낳고 있다.

당장, 공동위원장이냐 단독 위원장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본인 입으로 사퇴 여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 겸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주류 일각에서는 박 원내대표에게 당내 강경파에 밀려서는 안 된다며 비대위원장 겸임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특별법 파동을 겪으면서 리더십에 상처를 크게 입었다는 점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3선의 설훈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겸임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드러난 만큼, 그 방법과 시기는 박 대표가 선택하는 게 옳다"며 결단을 거듭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가 당내 인사가 아닌 '외부 수혈'을 선택한 것은 내년 초 전당대회에 앞서 당내 계파들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비대위원장직 '바통'을 제3자에게 넘기더라도 자신과 '호흡'이 맞을 수 있는 인사를 직접 발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외부 영입 비대위원장에 새누리당 비대위원 및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거론되면서 논란은 증폭되는 분위기다.

박 위원장이 당내 의견수렴 절차 없이 '낙점'하는 방식으로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인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새정치연합 초재선 모임인 '더좋은 미래'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더 좋은 미래는 긴급회의를 갖고 새누리당 비대위원이던 이상돈 교수를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당 지도부에 영입작업의 중단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이상돈 카드를 대체할 비대위원장으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도 외부영입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위원장 선임과 비대위원 구성 등을 놓고 당내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24일 취임후 첫 기조연설

한반도 통일구상 등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4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은 오는 22~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정상회의 및 제 69차 유엔총회, 유엔 사무총장 주최 '글로벌 교육우선구상' 고위급회의, 유엔 안보리 정상급회의 등에 잇따라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11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 인권증진, 경제사회개발 등 유엔의 3대 임무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의지를 밝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역내 국가간 신뢰증진을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구현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은 지난해 2월 취임 후 처음으로 글로벌외교의 심장인 유엔무대의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급들과 막전막후의 양자접촉을 통해 북핵 이슈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등을 두루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유엔총회는 북한의 외교수장이 리수용 외무상이 참석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숨가쁜 외교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다. 또 역시 유엔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접촉 여부도 관전포인트의 하나로 꼽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비리혐의' 박상은·조현룡

새누리, 당원권 정지 결정

새누리당은 11일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일 구속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당헌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당원에 대해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돼 있고, 당윤리위 규정에서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중지하고 최종 형 확정 시 탈당권유나 징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송광호 의원과 '함바(건설현장 식당을 일컫는 일본말)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안준태 부산 사하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기소가 확정되는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또 '빈손' 이완구-박영선 만남

세월호법 논의 별다른 합의점 못찾아… 오늘 재접촉키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모처에서 단독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이르면 12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두 원내대표는 2차 합의문을 전제로 야당과 유족들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다"며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더 갖기로 했다. 내일 또는 주말에 회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에서 이 원내대표는 2차 합의문에 대한 야당과 유가족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서 2차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보류한 상황에서 야당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추후 협상과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있었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차 합의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정확하지 않다면 어느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후반기 국회 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예산안 등을 고려해 다음 주 중 계류 법안을 논의하자고 말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안타깝지만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김무성 대표 "주말까지 세월호법 합의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에게 "모든 재량권을 갖고 마지막 협상을 해서 이번 주말까지 합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을 종합해보면 제 역할하지 못하는 우리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전한 뒤 "국민께서는 세월호문제를 이제는 그만 매듭짓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양 당의 의원총회는 이 합의(주말까지 이뤄질 합의)를 무조건 추인해서 국회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이 과정에 제3자 개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는 "민생을 위한 국회활동이 더 이상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여야 합의 하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의장께서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것이 국민께서 원하고 계시는 바"라고 촉구했다.

또 세월호유가족에게도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민적 충격과 슬픔· 분노에 여야는 다를 수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국가대혁신을 통해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한 사실을 언급한 뒤 "대통령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 새누리당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당의 명예를 걸고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